

헝가리의 정치 위기

4.5면

스웨덴 총선 결과

4면



타이 '쿠데타 반대 네트워크'의
자일스 자이 옹파콘

쿠데타에 맞선
저항이 시작되다

8면

정성진 칼럼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

발표 1백 주년
단일전선체 논의의 쟁점들

5면

7면

14호 2006년 9월 30일

국제적 관점 | 분명한 주장 | 회피하지 않는 자세

<http://www.counterfire.or.kr>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맞불

값 600원



미국들러리

자이툰은 돌아오라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자이툰의 실상을 <맞불>에 말한다. 이영순 의원은 타당 반전 의원들과 함께 19일부터 이라크 현지 조사를 벌이고 24일에 귀국했다.

이라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르빌 지역은 이라크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지역인데, 이 곳에 있는 자이툰 부대는 아직도 방탄조끼를 입혀서 밖에 내보냅니다. 사병들도 그렇고 우리[이라크 현지 조사 국회의원단]도 그랬습니다. 그럴 정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르빌에서도 방탄조끼를 입혀서 내보내는 상황인데, 하루에 1백 명이 넘게 죽는다는 바그다드는 어떻겠습니까.

자이툰 부대가 정말로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 지원'이라는 명분에 어울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자이툰의 파병 목적이 '전후 재건과

평화 지원', '한미동맹 공고화'였는데, 일단 전쟁 자체가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르빌은]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파병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죠.

자이툰 부대가 가서 한 일은 낙후된 쿠르드 지역의 재건을 도와준다고거나 아니면 이번 전쟁 이전의 내전으로 인한 피해를 복원한다고거나 하는 수준인데 이런 파병 목적에 맞지 않는 겁니다.

자이툰 부대가 활동한 내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의료 지원, 기술 교육, 대민봉사활동[민사작전] 등인데, 대민봉사활동에는 쿠르드 주민들에게 종이접기, 탈 만들기, 뜨개질, 태권도 같은 걸 가르치는 게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군대가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고 오히려 민간 차원의 다른 단체에서 하면 훨씬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이툰이 하는 활동은 이제 더 이상 군대의 활동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활동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 즉 미국이 일으킨 전쟁 그 자체가 미국이 석유 자원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으킨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한국군이 들러리를 서주는 것, 즉 다국적군에 포함돼 있는 것 자체가 이라크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이툰 부대는 하루 빨리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라크에 들어가기 전에 쿠웨이트에서 기자와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군이 여기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한국군은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명분을 살려 주기 위해서와 있는 거 아니냐.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것은 명백히 국제법 위반이다.' 하고 얘기하더군요.

자이툰 부대가 어떤 좋은 활동을 하든간에 파병 목적에는 맞지 않는 것이고, 잘못된 이라크 전쟁에 명분을 실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철군해야 합니다.

>> 3면으로 이어짐



추석 연휴로 한 주 쉽니다



인용해도 됩니까?

“악매[부시]가 어제 여기 왔었다.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 … 미국이 세계 인민들을 지배 · 착취 · 약탈하고 있다.”

— 9월 20일 차베스의
유엔총회 연설

“[전 미 국무차관보 리처드 아미티지가 파키스탄 정보국장에게 부시의 전쟁을 돕지 않으면] 폭격받을 각오를 하라, 석기시대로 돌아갈 각오를 하라고 했다고 들었다.”

— 파키스탄 대통령 무사라프

“자이툼 부대가 그 동안 땀과 노력으로 이뤄 놓은 각종 재건사업을 사후 관리해야 한다. … 이제부터는 예산과 노력을 통합해 효율적인 ‘애프터 서비스’ 개념으로 재건사업을 하자는 것”

— 파병 연장을 암시하는
자이툼부대 사단장 황중선

“태국의 군부 쿠데타를 남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 속내를 드러낸
한나라당 대변인 유기준

“처음 동료 검사들에게 수사를 받는 법에 관한 글을 쓰겠다고 말했을 때 미쳤나 하는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다가 … ‘조직에서 추방당하고 싶나?’라는 말까지 들었다.”

— 〈한겨레〉에 ‘수사 대처 요령’을 연재했던
금태섭 검사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은 1백50여 명에 불과하다.”

— 광우병 쇠고기를 너무 걱정 말라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 주이석

비만은 개인의 잘못인가?

영국 던디대학교 식품정책연구원인 카를로 모델리 박사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인들의 비만도가 최고치를 기록하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사상 최초로 아이들의 기대 수명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비만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다.

비만은 현재 영국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다. 비만은 당뇨병 · 심장병 · 뇌졸중 ·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만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태도는 위선적이다. 우리는 항상 비만과 건강 문제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들어 왔다. 우리의 건강이 나빠진 이유는 우리 스스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마거릿 대처의 핵심 슬로건을 차용해 “사회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다.

정크 푸드

국립보건서비스(NHS)가 비만인 사람들을 치료하길 거부하거나, 또는 그들을 비난하는 TV 프로그램이 계속 방영된다면 비만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왜 비만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인지 이해하려면 이 문제의 중심에 계급 문제가 놓여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주로 저소득 가정이 고칼로리 음식을 사먹는다. 이들은 공공 수영장이나 공공 스포츠센터를 대체하는 사설 체육센터에 다닐 수 있는 돈과 시간을 투자할 여력도 없다.

따라서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자라면서 음식 관련 질병을

포함해 건강이 악화된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총리실 산하 ‘사회적배제위원회’의 연구는 저소득과 수명 단축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2004년 발표를 보면 “여전히 소속 계급과 부모들의 건강 상태 그리고 교육 수준이 신생아의 생존률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 불이익이 대물림될 수 있다.”

그 결과 부자들과 가난한 사

람들 사이의 건강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과 건강이 연계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처는 충분치 않다.

우리가 더 많이 운동하도록 장려하려면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조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가난한 가정이 양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사람들이 살 만한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는 아이들을 줄이려면 정부는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비만 문제의 중심에는 계급 문제가 놓여 있다

그런데 정부는 비만 문제를 두고 개인을 비난하는 데는 열심이면서도 비만을 증가시키는 식품 산업을 비난하는 데는 그만한 열의를 보이지 않는다.

학교 급식 민영화와 규제 완화야말로 학교 급식에서 악명 높은 터키 트위즐레[저질 칠면조 가공 식품]와 정크 푸드[질이 낮고 건강에 이롭지 못한 식품]가 늘어나게 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정부는 잊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식품에 첨가된 소금 · 설탕의 양과 그 밖의 첨가물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조처를 강제하지 않음으로써 대기업과 상점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

우리는 개인을 비난하지 말고 사회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부의 재분배, 식품업계 대기업의 힘과 영향력을 제거하는 정책 등을 추구해야 한다.

헬 시의회가 2004년에 모든 초등학교에 무료급식을 실시한 결과, 가난한 지역의 95퍼센트에서 영양 섭취가 갑절 이상 늘어났다.

그러나 결국은 사회의 근본적 재편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럴 때만 우리는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잠재력을 모두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항하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보통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평균치보다 건강하다. 따라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과 비만을 퇴치하기 위해 뭔가를 해 보고 싶은 사람들은 토니 블레이어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에 참가해 보자.

번역 장호중

고용허가제 사후관리업무 위탁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정부는 고용허가제 사후관리 대행업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이하 중기협), 대한건설협회 등에 위탁하겠다고 밝혔다.

중기협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3년간 산업연수제 관리 기관을 맡아 온갖 송출 비리를 저지르고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유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산업연수제를 시행하자마자 중기협 연수협력단장이 송출업

제한테서 뇌물을 받았고, 1998년에는 아예 중기협 회장이 연수생 관리업체 선정 청탁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 2001년에는 1백4억 원에 달하는 연수적립금(연수생 신분 이주노동자가 작업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중기협에 강제로 맡기게 한 돈)으로 중기협 회장 자가용과 중기협 차량,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 중기협 직원 퇴직금 정산에 유용했다. 2002년에는 중기협

간부들이 50여 명의 브로커들과 결탁해 필리핀과 중국 이주노동자들에게 5억 원을 뜯어내 구속되기도 했다.

이런 사실들 말고도 중기협이 저지른 비리는 국정감사에서도 몇 번이나 폭로될 정도로 수북하게 쌓여 있다. 중기협은 이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온갖 횡포를 저질렀다.

대한건설협회도 비리로 악명

높다. 이주노동자들의 작업장이탈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연수생들’에게 강제로 적금을 들게 하고, 기업주의 허락이 없으면 은행이 이주노동자에게 적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할 정도다.

이런 단체들에게 이주노동자 현지 선발부터 사후관리까지 고용허가제의 전 과정을 맡기는 것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다.

더구나 정부가 그간 1년 넘게 중기협과 사후관리 대행기관 선정 문제를 밀실 논의해 온 것이 밝혀져, 이주인권연대 · 외노협 등 시민단체들은 더한층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조승희

이라크에 가는 전경련

피비린내 나는 기업 이윤 추구

지난 14일 전경련은 오는 11월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이라크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3백50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에 참여하라고 한국 기업들에게 요청하자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 기업을 재건사업에 참여시키는 대신 자이툰을 오랫동안 이라크에 잡아두고자 하는 듯하다.

한국 기업들은 특히 쿠르드 지역의 석유에 관심이 많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채널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번 사절단 파견이 [건설과 석유화학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의 대규모 수주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004년 김선일 씨 살해 사건 때문에 한동안 한국 기업의 이라크 현지 진출을 통제해 왔다. 그래서 일부 자본가들은 재건사업의 이익을 다른 나라에 빼앗길까 봐 노심초사했다. 올해 초 <동아일보>는 "[김선일 씨의 희생 등이] 값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이라크에 활발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이에나

정부가 이라크 현지 직접 진출을 제한하는 동안에도 자본가들이 이라크 진출을 포기했던 것은 아니다. LG 등 15개 한국 기업이 작년 '이라크 재건 박람회'에 참가했고 요르단을 "전진기지" 삼아 이라크로 진출할 방법을 모색해 왔다.

전경련은 노무현의 자이툰 파병을

내놓고 지지해 왔다. 이라크인의 시체 더미에 달려드는 하이에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전경련은 작년 12월 자이툰 부대를 방문해 자이툰이 "한국 기업의 중동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한 적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LG전자는 이라크를 포함해 중동 지역 전체에서 급속한 매출 신장을 이뤘다.

자이툰 부대도 한국 자본가들의 사악한 염원에 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방부 일각에선 "'국익'을 위해 장기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

지난해 12월 자이툰 부대를 방문한 전경련 대표단

제적 이익을 챙기기 전까지 철군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이툰은 한국 기업이 쿠르드 지역에서 유전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에 대비해 "다기능 건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파병 재연장 시도는 기업들이 다시 이라크로 직접 진출하려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반전 운동은 학살과 점령을 돕는 파병을 통해 '실리'를 챙기려는 노무현 정부의 시도에도 반대해야 한다.

한규한

>>> 1면에서 이어짐

조사 활동 기간 중에 한국 정부 쪽의 방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의 의원이 이라크에 가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교섭을 할 때부터 정부는 바그다드는 위험하기 때문에 가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보겠다는 의사 표명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정부 측에서 못 가게 하려고 미루거나 과장되게 표현했습니다. '비행기편이 없다, 언제 뜰 지도 모른다' 하는 식으로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비행기가 일주일 에 몇 대는 다니더군요. 그런데도 정부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

하면서 못 가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꼭 바그다드에 가서 그 쪽 현지 주민들 얘기를 듣고 싶다. 우리가 여기 와서 지낸 곳은 쿠웨이트와 아르빌, 그야말로 친미적 성향이 강한 쪽들만 봤기 때문에 실제 위험한 지역에 있는 이라크 사람들 얘기를 듣고 싶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위험해서 안 된다. 대신 사단장이 미군과 수시로 회의[동맹군회의]를 하니깐 그 수준으로 보고를 해 주겠다'고 해서 결국 바그다드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정부의 파병 재연장 시도에 맞서 파병 반대 의원들, 특히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입니까?

합참 관계자는 우리에게 '파병 재연장

을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하더군요. 그러면 철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전혀 세우고 있지 않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정부가 추가 연장안을 들고 나오기 전에 하루 빨리 철군해야 한다는 여론을 더 많이 확산시켜야 합니다. 지금부터 민간 단체든 의회든 각 당이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자이툰이 빨리 철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 같이 다녀온 의원들은 각 당이 철군에 대해서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입니다. 민주노동당은 9월 27일에 이라크 현지 조사 보고 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철군을 주장해야 합니다.

인터뷰 · 정리 김용민

9 23 반전행동

젊고 다양하고
열정적인 운동

1천5백 명이 9·23 반전 시위에 참가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도 1백 20여 명이 참가한 반전 시위가 열렸다.

9·23 반전 시위는 올해 3·19 행동 이후 다시 한 번 반전 운동의 저력을 보여 줬다. 미국 평화재향군인회, 반전 의원들, 민주노동당원들, NGO, 종교인, 청소년 평화단체 '전쟁을 반대하는 청소년들', 보건의료인, 노점상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반전 시위 주변에서는 한미FTA 반대 퍼포먼스가 열리고, 에이즈 감염인 인권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를 알리는 홍보대가 차려져 다양한 사람들이 반전 운동에 참가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9·23 반전 시위를 건설하는 과정도 매우 성공적이었다. 1백30개 단체와 1천 명이 넘는 개인들이 시위를 후원했다. 지난 3·19 행동 때보다 개인 후원이 4백 명 늘었다. 파병 반대국민행동의 거리 홍보전에서는 한 시간 만에 1백80여 명이 서명을 했다.

일부 대학과 지역에서는 기층 반전 공동전선이 성공적으로 활동을 조직했다. 지역 반전 집회에 1백 명이 참가했고, 지역 반전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영국 맨체스터 노동당 전 당대회장 앞에서는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전쟁 정책에 반대하면서 그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반전 시위에 5만 명이 참가했다.

9·23 반전 시위는 하반기 반전 운동을 조직하는 데 성공적인 디딤돌 구실을 했다. 반전과 파병 반대 여론은 이제 대체다(77.5 퍼센트). 반전 운동은 실로 민중을 대표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집회

9월 24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집회에 1만 명이 참가했다. 운동의 사기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고 최근 우파들이 운동에 대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1만 명이 결집한 것은 성공적이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집회가 서울에서 열렸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다. 이 운동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에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 대사관과 청와대가 있는 서울에서 시위를 벌이는 것이 효과적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요구와 함께,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의 핵심인 중동 전쟁과 자이툰 부대 파병 비판이 결합됐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김광일



홍미정(한국외대 연구 교수)

《맞불》의 창간을 환영합니다. 《맞불》이 일반 언론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지역과 계층의 주민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맞불》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주간지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맞불》 창간을 축하하며

스웨덴 총선 결과가 보여 주는 것

9월 17일 스웨덴 총선에서 온건당의 프레드릭 라인펠트가 이끄는 우파연합이 48.1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1.9퍼센트라는 근소한 득표 차이로 중도좌파를 누르고 승리했다. 지난 1994년 이후 12년 간 집권한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패배한 것이다.

스웨덴 사회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패인은 온건당의 ‘중도화’ 전략이 통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한 것이다. 1994년 집권 이후 사민당은 재정적자와 대외부채 해소가 최우선이라며 사유화와 연금 축소, 교육·의료 부문 규제 완화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스웨덴 한인 교민의 말을 보면 “세금은 더 내는데, 의료비의 자기 부담률은 갈수록 높아져 복지 수준은 훨씬 떨어졌다.”

사민당은 증가하는 실업률에 대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 채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는 낮은 편이라고 강변해 우파연합이 파고를 여지를 줬다.

결국 스웨덴 사람들은 야금야금 복지를 축소하는 사민당과 ‘복지 축소 후 일자리 창출로 복지를 유지하겠다’는 우파연합 사이에서 억지충항식 선택을 강요당한 셈이다.

공산당의 후신인 좌파당은 복지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그 동안 줄곧 사민당을 지지해 온 것 때문에 지지율이 8.3퍼센트에서 5.8퍼센트로 떨어졌다.

주요 패인은 아니었지만 사민당 정부의 오만한 인사 정책이나 2004년 쓰나미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도 사민당의 패배에 한몫 했다.

온건당은 자신들이야말로 ‘스웨덴 모델’의 옹호자이고 “일하는 사람들의 당”이라고 노동계급을 무마한 덕분에 가까스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라인펠트는 “복지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 자리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계적 대기업들의 신문인 〈파이낸셜타임스〉조차 “[사민당의] 페르손 총리는 이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할 때가 됐지만 스웨덴 모델은 아직 그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스웨덴 우파연합은 “국민 개개인에게 좀 더 많은 선택권을 줘야 한다”며 법인세 절만으로 인화, 부동산 보유세 폐지, 실업수당 축소,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

민영화

한국의 우파 언론들은 스웨덴 국민 대중이 복지 모델을 폐기했다고 제 눈에 물 대기 식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스웨덴식 복지 모델을 전범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를 비난하기 바꿨다. 노무현 정부가 ‘비전2030’이 “적정부담·적정복지”인 반면 스웨덴 모델은 “교부담·교복지”라고 깎아내리는데도 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지출이 8.6퍼센트로 스웨덴(28.9퍼센트)은 고사하고 멕시코(11.8퍼센트)나 터키(13.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국에서 “복지와 분배만으로 이제 안 되고 시장과 경쟁의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우파들의 주장은 실로 역겹다.

스웨덴 복지에 대한 공격이 강해질수록 스웨덴 노동자들의 불만과 저항도 커질 것이다. 그래서 스웨덴 사용자연맹(SAF)이나 온건당은 급속한 복지 해체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도입을 원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단계를 밟아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강동훈

정성진의 맑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연속혁명론 발표 1백 주년

정성진(경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트로츠키의 사상은 우리 나라에서도 이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이 정식화된 〈평가와 전망〉(책갈피)이 출간된 지 1백 돌을 맞는 오늘날 트로츠키를 빼놓고 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를 논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사상 지형의 변화이다. 지난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트로츠키는 마르크스주의의 이단으로, 심한 경우 미 제국주의의 고용 간첩으로 매도당한 것을 생각하면 말이다.

최근 이런 정세를 보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모든 종류의 비난이 트로츠키주의에 대한 적대감으로 집중되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우리 나라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자칭 포문주의자 가라타니 고진은 마르크스가 1850년 이후 포기한 연속혁명의 사상을 트로츠키가 1906년 되살리고 이것을 1917년 레닌이 10월 혁명에 적용한 것에서 20세기의 ‘극단의 시대’가 비롯됐기 때문에 ‘원흉’은 마르크스나 레닌 또는 스탈린이 아니라 바로 트로츠키라고 주장한다.

이는 아마도 트로츠키주의만이 21세기 오늘날 유일하게 마르크스주의의 혁명적 전통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이지, 지난 ‘극단의 시기’ 동안 온갖 탄압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스탈린주의·사회민주주의·포스트모더니즘 등 각종 사이비 진보에 맞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을 방어하여 21세기 오늘날까지 계승해 온 것은 트로츠키주의뿐이었다.

하지만 트로츠키의 기여를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수호한 것으로만 축소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트로츠키는 레닌과 함께 1917년 10월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고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 국가 건설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1917년 이전 시기 〈평가와 전망〉의 연속혁명론, 10월 혁명 이후 1929년 국의 추방까지 〈좌익반대파 강령〉으로 집약되는 노동자국가 건설론, 1940년 스탈린에 의해 살해되기까지 〈배반당한 혁명〉으로 대표되는 스탈린주의 비판은 모두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에 대한 트로츠키의 독창적인 이론적 기여였다.

필자는 이 중에서도 청년 트로츠키가 1906년 〈평가와 전망〉에서 체계화한 연속혁명 전략 및 이를 이론적으로 근거지운 불균등결합발전론이야말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 대한 트로츠키의 진정으로 독창적인 불멸의 기여라고 생각한다.

물론 연속혁명론의 맹아는 1848년 혁명 직후 마르크스가 제시한 바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정식화하고 불균등결합발전론으로 기초지은 것은 트로츠키이다.

트로츠키는 연속혁명론에 기초하여 러시아에서 일어날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일 것임을 예견했으며, 이는 1917년 혁명에서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입증됐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부르주아 혁명이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이 될 것이라는 점은 1906년 당시 레닌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레닌은 1917년 〈4월 테제〉 발표 즈음에야 이와 같은 생각에 비로소 도달했다.

실제로 레닌은 1917년 〈4월 테제〉 이전까지는 제2인터내셔널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교의였던 2단계 혁명론의 전통과 결별하지 못했다. 예컨대 레닌은 1906년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에서 러시아의 혁명은 ‘노동자와 농민의 민주주의적 독재’를 수립하는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트로츠키는 만약 혁명이 이처럼 민주주의 단계에 머문다면, 노동자 대중이 정치권력을 장악했음에도 생산 현장에서는 자본가의 착취와 억압을 감수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초래될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결코 지속적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혁명의 동학은 결코 혁명이 민주 변혁 단계를 완수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으로 집약되는 레닌의 〈4월 테제〉는 레닌이 2단계 혁명론을 폐기하고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을 수용했음을 보여 준다. 1917년 10월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의 하나는 다름 아닌 연속혁명 전략의 적용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스탈린은 1924년 이른바 일국사회주의론으로 연속혁명론을 대체한 다음, 다시 2단계 혁명론을 N(민족해방) 혹은 PD(민주민주주의)의 형태로 공식화하여 각국 공산당들에게 강요했다.

스탈린주의의 2단계 혁명론은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사회주의 단계들로 단절될 수 없는 혁명을 단계에 따라 진행시키려 하는 자기제한적 전략으로서, 지난 20세기 혁명의 역사에서 보듯이, 최악의 경우 투쟁하는 민중에 대한 대량 살육이나 파시즘 같은 대재앙으로 귀결했으며, 최선의 경우에도 사회민주주의나 민족개량주의로 수렴됐다.

그렇다면 20세기 ‘극단의 시대’는 가라타니 고진이 강변하듯이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 때문에 초래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것이 스탈린에 의한 10월 혁명의 압살과 함께 초기에 폐기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트로츠키의 연속혁명 사상의 획기적인 세계사적 의의를 감안한다면, 트로츠키에 고유한 이론은 없으며 트로츠키는 “서기장이 되지 못한 스탈린”일 뿐이라는 알튀세르나, 여기에서 한 술 더 떠 트로츠키를 아예 스탈린과 한통속의 반혁명 세력으로 모는 평의회공산주의나 좌익 공산주의(예컨대 얼마 전 ‘빛나는 전망’ 출판사가 발간한 〈트로츠키주의 비판〉이 그런 경우다) 자율주의, 포문주의자 등이 트로츠키 사상의 정수인 연속혁명론을 애써 외면하고, 1920년대나 1930년대 극도의 고립과 박해 속의 트로츠키의 일부 연설만을 표적으로 삼아, 그것도 맥락을 무시한 채 거두절미식으로 난도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다.

〈평가와 전망〉1백 주년을 맞이해 출판된 〈연속혁명 1백 주년〉(플루토)에서 보듯이 마이클 로이, 다이엘 벤사이드, 로제버그, 라디스, 본드, 데이빗슨 등 세계 주요 학자들은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과 불균등결합발전 이론이 마르크스주의 세계경제론 및 국제관계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이를 오늘날 중국이나 남아공과 같은 구체적 정세 분석에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21세기 글로벌 자본주의에서 더욱 격화되고 있는 불균등결합발전은 세계 도처에 연속혁명의 약한 고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은 1백 년의 세월을 넘은 오늘날 세계 진보 진영의 하두인 “21세기 사회주의”에 유용한 시사를 제공하는 고전 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보물이다.

이 글을 쓴 G. M. 터머서는 헝가리 철학 교수이고, 반체제 인사였으며 국회의원을 지낸 바도 있다.

1989년 이후 동유럽에서 전임 정부가 연임에 성공한 경우는 처음이었다. 지난 5월 헝가리 유권자들은 사회적 자유주의 연립정부(이하 연정)가 신자유주의 정책과 몇몇 사회정의적 요소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온건한 정책들을 지속하길 바라며 다시 현 정부에 투표했다.

2002년 첫 집권기가 시작될 무렵 연정은 교사·의사·간호사·지방공무원 등 국가 공무원들의 임금을 인상했다. 실질임금이 약 30퍼센트 인상됐다. 물론 재정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이자 상환 때문이었다.

이자 상환과 해외 자본유출이(노이에 취리허 차이퉁)에 따르면) 헝가리 국제수지 적자의 85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러나 선거 후 페렌츠 주르차니[총리]가 이끄는 사회적 자유주의 정부는 완전히 태도를 바꿨. 지나치게 후한 사회정책(총리는 이를 ‘사회적 낭만주의’

라고 불렀다)의 중단, 긴축 조치의 도입, 세금 인상과 연금 축소, 철도 등 대중 교통 수단과 국가 보건 서비스의 사유화 추진, 수입료 도입, 민-관 협력(일종의 민자유치 사업) 방식의 일반화, 임금과 연금의 동결 등을 발표했다.

사회적 자유주의

아마도 이 자체로는 폭력 사태는 물론 상당한 저항도 촉발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주르차니가 연정의 주요 파트너인 사회당 의원들의 비공개 모임에서 한 연설 내용이 9월 초에 언론에 공개됐다. 이 연설에서 주르차니는 — 욕설이 난무하는, 대단히 솔직하고 노골적인 어법으로 — 전체 선거 강령을 포함해 자신이 선거 운동 기간에 말한 게 모두 철저한 거짓말이었고, 선거 기간에 내놓은 정책들 — 현재 노골적으로 폐기처분되고 있다 — 은 유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선언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사회당이 선거에서 패배했을 것이라고, 15명의 관료들만 알고 있는 그들의 진짜 강령에 투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

한편으로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사회당 지도부는 그들이 공표한 것과는 거의 완전히 상반되는 강령을 아주 은밀하게 그러나 열렬하게 추진했다.

분노가 전국을 휩쓸었다. 처음에는 우파가 시위를 주도하는 듯했다. 10월 1일 치를 지방선거를 앞둔 지방 순회 유세에서 주르차니 — 노동계급 출신이지만 1989년 이전의 일당독재 체제에서 ‘공산당청년동맹’ 서기를 지냈고 1990년대 이후 백만장자 기업인이 돼 공산당 출신의 정치 귀족들과 결탁했다 — 는 엄청난 야유를 받았고, 이는 대부분 우파 ‘야유관들’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뒤 부다페스트와 헝가리에서는 드물게 지방 도시들에서도 시위가 시작됐다. 이 시위들은 곧 폭력적 양상으로 발전했다. 군중은 수도 한복판에 있는 국영 TV 방송국을 점거하고, 건물을 파괴하고, 당황한 경찰을 공격했다. 부상자 2백여 명 가운데 1백25명이 경

찰이었는데, 이는 평소와는 사뭇 다른 비율이었다.

정치 집회가 거의 끊임없이 열리는 의회 광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밤중까지 토론과 논쟁을 한다. 방송국이 점거된 날 밤, 경찰은 의회 광장에서 군중을 몰아내며 양갈음을 했다. 극단적인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차량과 상점이 불에 탔다. 수백 명이 기마경찰에게 쫓기며 얻어맞고 체포됐다. 국가 안전부 장관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언급했다. 시위대는 혁명을 주장하며 정부·주류 언론·허수아비 대통령인 쇼을 박사가 모두 공범이라고 말했다.

기마경찰

주류 언론들은 ‘파시스트 폭도들’ 운운하며 프랑스 [빈민가 청년들의] 소요 사태 때 프랑스 우파 정 치인들이 막말을 내뱉은 것과 똑같이 대중에 대한 엄청난 경멸을

드러냈다. 물론 시위의 이데올로기는 우파가 주도했다. 축구 홀리건들이나 다른 팔사나운 괴짜들이 폭력 사태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대개 대중적 분노의 매우 본능적이고 비정치적인 표현이다.

그럼에도, 시위대들에게는 분명히 핵심이 있었다. 하나는 그들이 철저히 기만당했다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제안한 정책들이 끔찍하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시위의 이데올로기를 광적인 우파들이 지배해 온 것은 헝가리 사회의 조직화 수준이 매우 취약하고 노동자들은 허악한 데다 분열해 있고(최근의 조사를 보면 13개의 전국 노총이 있다) 이렇다 할 정치 좌파도 없기 때문이다. 소규모 ‘독립’ 좌파 단체들은 겁을 먹고 ‘차악’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 시위에는] 총리 퇴진을 주장하는 좌파도(필자를 포함해) 극소수 포함돼 있다.

번역 김용민

아프리카 활동가들을 케냐 세계사회포럼에 보냅니다



2007년 세계사회포럼이 열리는 케냐로 가려는 아프리카 동지들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모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케냐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남아공 정규직 노동자 수입의 2배, 빈곤층이나 실업자 한 달 수입의 13배의 거금이 필요합니다.

10월 30일까지 진행될 모금에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아프리카 활동가들을 위한 후원 모금 계좌

국민은행(예금주: 김은영) 527801-01-134512

아프리카 활동가들이 보낸 모금 호소문

우리 아프리카 반자본주의 운동 활동가들은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개최될 세계사회포럼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며 억압, 자연 파괴, 전쟁, 신자유주의 공격 등에 맞서는 우리 투쟁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소수만이 여행 경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상 교통수단을 이

용할 경우 적어도 6000Rand(약75만 원)가 들며 이 금액은 남아공 노동자 평균 월급의 2배이며 연금 또는 장애인 지원금의 13배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동지들에게 교통비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에 연대해 주시기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다른 세계를 위하여!!

다함께의 기본 입장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다.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를 위해 싸운다.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다. 자본주의는 폐지되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다.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다.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다.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한다.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다.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다.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다.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회이다.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한다.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다.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억압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다.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우리는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한다.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한다.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에 어긋남을 실전에서 입증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기아차

비정규직 투쟁이 승리하다

기아차 비정규 투쟁의 결과를 보고 전국의 비정규직 투사들은 ‘기아 비정규직이 해냈다’, ‘기아 동지들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 주었다’며 크게 기뻐하고 있다.

기아 동지들은 이번 투쟁에서 불법 파견 공정을 정규직 공정으로 전환하고 해당 공정의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 여유인력 발생이나 전환배치시 고용승계 보장 등을 따냈다.

사실상 원청사용자성을 투쟁으로 인정시킨 것이고 원청자본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했다. 또, 고소·고발을 철회시켰고 2명의 해고자 문제도 해결했다. 물론 낮은 임금인상 등은 아쉽지만 승리가 빛을 바랄 정도는 아니다.

이 승리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단

단호한 파업이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호한 투쟁과 정규직 활동가들의 연대가 만들어낸 것이다. 비정규직 파업으로 사측은 1천6백억 원의 손실을 입

외대파업 무노동 무임금 적용

학생과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비열한 시도

외국어대는 지난 18일, 직원들의 파업동안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그간 적립된 임금 40여억 원을 학생 장학기금과 도서관 신축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철 총장은 해마다 재단전입금 30억 원 납부 의무를 지키기 않았고 올해 등록금을 무려 11.4퍼센트 인상했다. 심지어 이런 정책을 비판한 학생을 징계하기도 했다.

이런 박철 총장이 원래 노동자들에 가야 할 몫을 학생들에게 쓰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구성원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가 원래 해야 할 투자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기

도 하다.

〈민중의 소리〉는 건물 신축 기금과 장학금으로 나갈 임금 적립금은, 재단의 투자가 없다면 다시 등록금 인상으로 돌려질 것임을 지적했다. 결국 ‘조삼모사’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학교의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상쾌한 소식”이라고 극찬했지만, ‘무노동 무임금’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가로막는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해 파업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김영삼 정부 때 노동부장관이던 이인제조차 문제제기했었고, 민주노조 운동의 성과로 무력화시

었다며 전전긍긍했고 정규직 활동가들은 6명이 고소·고발되는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연대했다. 특히 정규직 ‘노동해방 선봉대’와 ‘노동자의 길’의 연대가 돋보였다.

정규직 18대 집행부는 비정규직 투쟁을 방관하다가 막바지에 중재자 역할을 한 정도였지만, 정규직 활동가들은 집행부 비판에 머물지 않고 독립적인 연대를 건설했다. 다양한 현장조직들이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연대 투쟁을 조직한 것도 승리의 큰 힘이였다.

기아차 비정규직 투사들과 연대한 정규직 활동가들에게 열렬히 박수를 보낸다. 고난을 거둬들이며 힘겹게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기아차 투쟁은 갈 길을 보여 줬다.

김우용(기아차 정규직 활동가)

켜 왔던 독소조항이다.

게다가 외대노동자들은 파업이 1백 70일 넘게 계속되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비와 자녀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엄청난 빚을 지고 커다란 고통을 받고있다.

노조 탄압과 등록금 인상, 학생 징계는 박철 총장이 외대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면서 동시에 벌어진 일이다.

따라서 학생과 노동자가 단결해 싸우는 것이 학교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철회하고 노동자와 학생 모두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최미진·조명훈

Forums

대학 맑스주의 포럼

성균관대

강탈국가 이스라엘: 시온주의와 제국주의
9월 27일(수) 오후 6시
장소: 수선관 61706호
문의: 010-6689-0088

성공회대

한미FTA,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9월 27일(수) 오후 7시
장소: 새천년관 7204호
문의: 011-9825-9753

외대

한미FTA,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9월 27일(수) 오후 6시 30분
장소: 인문과학관 509호
문의: 011-9937-1755

고려대

신자유주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9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문과대(서관) 317호
문의: 010-3181-5032

이화여대

강탈국가 이스라엘: 시온주의와 제국주의
9월 28일(목) 오후 6시 30분
장소: 학생문화관 501-2호
문의: 010-2263-1106

지역 사회 포럼

남부

신자유주의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가?
9월 27일(수) 오후 8시
장소: 전교조 서울본부(7호선 이수역)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6495-9925

중부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 투쟁
10월 18일(수) 오후 8시
장소: 향린교회 1층 향우실
참가비: 2천 원
문의: 019-647-3309

★ 대학맑스주의포럼과 지역사회포럼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이란 공격에 반대하십니까? ☐

비정규직화와 한미FTA에 반대하십니까? ☐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 성 지향, 인종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십니까? ☐

토론하고 논쟁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활동가들의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표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정기구독
하십시오

6개월 / 2만 원

(신문값 15,500원 + 우송료 4,500원)

1년 / 4만 원

(신문값 31,000원 + 우송료 9,000원)

atgmail@nate.com 전화: 02-2271-2395

계좌번호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백은진

상설연대체 논의의 문제들

최일봉

민중연대는 내년 초쯤에 새로운 상설 연대체를 띄울 것 같다. 이 상설연대체에 대해 지금까지 ‘자주계열’(이하 NL로 줄임) 이론가들로부터 나온 주장들을 토대로 이미 ‘다함께’의 김하영 동지가 몇 가지 물음을 던진 바 있다. (1) 계급 연합 문제, (2) 느슨할 필요성 문제, (3) 상설연대체와 사안별 연대체의 관계 문제, (4) 민주노동당의 우경화 수반 여부 문제 등이 그것이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 NL 주요 논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한 논자의 논조도 그동안 다소 변해, 전체로서의 NL 진영의 제안 자체는 모호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면 제약상 (4)번 문제를 제외하고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계급 연합 프로젝트?

어떤 NL 논자들은 자본가 계급의 일부와도 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논자들은 ‘중간층’과의 연합만을 얘기한다. 후자의 경우, ‘중간층’이라는 말 자체를 매우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 중소 자본가 계급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계급을 뜻하는 것인지, 후자의 경우 중간계급 전체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층들만을 뜻하는 것인지 도무지 분명하지 않다.

중소 자본가 계급과 상층 중간계급은 근본적으로 대자본가 계급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들 중 일부 개인들은 노동운동이 강력하면 좌파 진영에 가담한다. 그리고 이 경우 좌파는 이들을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추수(실용주의적 연합)해서는 안 된다. 자본주의 체제가 이들에게 가하는 압력은 이들이 원칙 있고 규율 있는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입신양명의 길을 찾도록 유혹하기가 쉽다.

개인 거취 문제가 아니라 계급 동역학 문제로 말하자면, 이들 친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급들과의 연합(1934년 이래로 ‘인민[민중]전선’이라는 용어로 불렸다)은 반동세력이 발호할 때 노동운동의 발목을 붙잡고 마비시킨다는 위험이 있다.

사실, NL 이론 자체는 계급 연합을 기피할 아무런 이유도 내포하고 있지 않다. 남한 사회를 ‘(미국에 예측된)식민지 반봉건 사회’로 보고, 당면 변혁의 성격을 민주주의 변혁의 일환인 민족해방으로 보고, 변혁을 통해 세울 정권의 성격을 ‘자주적 민주정부’로 보고, 집권을 위한 핵심 전략을 민족민주전선으로 본다 면, 중간계급은 물론 심지어 지배계급의 일부와도 연합하지 못할 까닭이 없다.

그러므로, ‘다함께’의 김하영 동지가 상설연대체를 계급 연합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정대연 민중연대 정책위원장의 비판은 김하영 동지의 통찰과 일리 있는 우려를 애써 부인하는 것이다.

정 위원장의 부인은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과 민족통일과 화해·협력적 남북관계를 위한 운동이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는 고전적 맑스주의에서라면 몰라도 NL 사상 체계에서는 두 영역이 결코 분리되지 않을 뿐 아니라, 둘 가운데 민족통일이 최종 해결책으로, 따라서 더 근본적인 것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NL 사상에 서) 민족통일이 자본가 계급을 굳이 배제해야 하는 일이 아닐진대 상설연대체가 부르주아지의 일부와 연합을 굳이 배격할 까닭이 없다.

따라서 상설연대체가 계급 연합이 아니라는 주장은 **지금으로선** 그렇다는 단서와 함께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느슨할 필요성

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상설연대체가 조직 구조 면에서 느슨할 필요성에 대체로 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전에 NL 논자들이 거의 다 조직이 단단할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 여파로 경남진보연합은 최근 조직상의 집중성을 강화하고 있다.(바로 이 때문에 그다지 변창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세계 수준에서든 한국 수준에서든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치적 급진화가 진행돼 온 결과, 단일 쟁점을 넘어 복수의 쟁점을 둘러싸고도 공동 활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게다가 주류 개량주의 정당들이 실망과 환멸을 안겨주는 정치적 경험을 거듭한 결과, 급진 좌파 정치단체가 개량주의자들의 왼쪽에 생겨난 공백을 시급히 메울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각 단체가 강조하고 주력하는 쟁점이 여전히 다르고 쟁점을 다루는 방

식도 서로 달라 상설연대체는 **조직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느슨할 필요가 있다.

조직 문제에서는 아무도 집중제 같은 엄격한 조직을 고집하지 않는 한편, 일부 비(非)NL 단체들은 더 나아가 대의제도(특히 대의원대회)를 아예 두지 말자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다함께’는 연방제가 알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면 제약상 이 자리에서 조직 문제를 자세히 논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정치적** 느슨함이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다. 이 문제의 핵심을 NL 동지들은 아쉽게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정치적 느슨함 문제는 다른 무엇보다 각 단체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상설연대체 각 구성 성분의 독자적 행동권이 완전히 보장돼야 하고 서로 비판이 자유로워야 한다.

또한 각 경향이 자기네 고유의 이데올로기를 지나치게 고집하지 않아야 한다. 타협이 불가피하다.(이는 레닌의 ≪‘좌파적’ 공산주의 — 어린이 같은 혼란≫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다.) 그렇지 않고, 예컨대 한국인이려면 누구나 ‘민족 자주’ 사상을 받아들일 것처럼 가정하고 다른 동맹들에게 강요하려 한다면 반드시 갈등을 빚고야 말 것이다. 단지 국제주의자들뿐 아니라 적잖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심지어 적잖은 자유주의자들도 민족주의적 언사에 불편함을 느낀다.

사실, 상설연대체의 미래는 NL 동지들이 얼마나 자신의 정치문화와 활동 방식을 바꾸는 데, 심지어 말투도 바꾸는 데 성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상설연대체의 건설을 “민중연대와 통일연대의 통합”이 핵심인 문제로 인식한다면, 실제로 거기서 그치는, 즉 전국연합의 재판에 불과한 걸로 끝나는 성과만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2003년 5월 21일 전국민중연대 출범식

사안별 연대체에 대한 태도

아무리 급진화가 진행됐어도 운동 참가자들 의식의 발전은 불균등한 법이다. 투쟁 경험과 생활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에 반대해도 신자유주의에는 반대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 또, 이 둘에 모두 반대해도 노동자 투쟁은 마뜩치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운동이 광범해지려면 NGO들이 동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흔한데, NGO들은 그들의 이데올로기와 전통상 상설적인 연대체를 그다지 내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안별 연대체는 여전히 중요하다. 아쉽게도, 대다수 NL 활동가들은 사안별 연대체가 상설연대체보다 저급한 조직 형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논자는 불행히도 별로 없는 듯하다.

NL 동지들이 사안별 연대체보다 상설연대체가 더 우월하고 더 진보한 형태의 조직으로 보는 경향이 계속되는 한은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날 것이다.

애당초 ‘다함께’는 고전적 공동전선으로서 각종 사안별 연대체, 신형 공동전선, 즉 상설연대체로서 민주노동당, 단일 정치조직으로서 ‘다함께’라는 세 가지 조직적 틀을 모두 강화하면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여기에 또 하나의 상설연대체가 생기는 것이 꼭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게다가 상설연대체 건설의 목적이 혹 시라도 그것을 제안하고 있는 특정 경향의 내부적 이유, 즉 전진하고 있다는 느낌을 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실제의 후퇴를 은폐하는 것이라면, ‘다함께’는 명목상의 참가에서 더 나아가 실질적 헌신을 할 동기 부여를 받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

I 타이 쿠데타에 저항하는 행동이 시작되다

타이의 ‘쿠데타 반대 네트워크’ 리더인 **자일스 자이 웡파콘**이 쿠데타에 맞서는 저항 소식을 〈맞불〉에 보내 왔다. 그는 타이 출라롱콘대학교 교수이자 국제사회주의경향(IST) 소속 단체인 ‘노동자민주주의’의 리더이며, 이번 쿠데타 반대 시위 발의자로 국내 신문들에 소개된 바 있다.

9월 19일 저녁, 자칭 “푸미폰 국왕에게 충성하는 민주개혁평의회”의 군부 인사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적으로 선출됐지만 논란이 많았던 탁신 치나왓 총리를 몰아냈다.

군사 독재 정부는 지난 60년 간 타이 군부 쿠데타의 전통을 따라, 자신들이 정치 개혁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고, 개인의 권력 추구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며, 최대한 빨리 국민에게 권력을 돌려 주겠다고 선언했다.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보면, 그들의 말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지난 1991년 쿠데타 때도 군부는 똑같은 변명과 약속을 했다. 당시에 군부는 1년 뒤 수만 명의 민주화 요구 시위대와 유혈 충돌을 빚은 뒤에야 물러났다.

군부는 많은 쿠데타 세력들이 그랬듯이 국왕의 지지를 받으려 애썼고, 실제로 그의 지지를 받아냈는데, 이것은 국왕의 반민주적 성격을 잘 보여 준다.

군사 정부의 공식 이름 – 푸미폰 국왕에게 충성하는 민주개혁평의회 – 은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을 연상시킨다. 이제 ‘민주주의’는 군사 독재를, ‘개혁’은 1997년 헌법 파괴와 의회 독립 기구들의 폐지, 그리고 계엄령 선포를 의미한다.

탁신의 모습을 TV에 방영하는 것도 불법이다. 〈BBC 월드 서비스〉가 탁신의 모

습을 내보내자 난데없이 광고가 화면을 대체했다.

불법

쿠데타를 환영하는 [타이] 대중의 모습이 나 탱크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행복한 모습 등 공식적으로 선전되고 있는 이미지들과는 달리 쿠데타에 반대하는 저항 운동이 이미 조직되기 시작했다.

쿠데타가 일어난 지 24시간 만에 학생과 청년 활동가 등이 ‘쿠데타에 반대하는 9월 19일 네트워크’(이하 ‘쿠데타 반대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쿠데타 반대 네트워크’는 9월 22일 저녁에 방콕 중심가에서 계엄령을 어기고 시

위를 하기로 결정했다. 시위가 열린다는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이메일로 전해졌다. 우리[‘쿠데타 반대 네트워크’] 웹사이트가 폐쇄됐지만 많은 활동가들이 시위 소식을 알고 있었다.

우리 시위는 국내외 언론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고, 시위 동조자들은 시위 참가자들을 방어하는 행동에 나섰다. ‘쿠데타 반대 네트워크’는 탁신 정부를 반대하지만 쿠데타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민주주의는 쿠데타로 지켜질 수 없으며, 정치·사회 개혁은 독재의 분위기에서는 이뤄질 수 없다. 우리는 세 가지 기본 요구를 내놓았다.

1. 군대는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2. 1997년 헌법을 즉각 복원하라.

3. 언론 자유를 포함한 민주주의 기본권들을 즉각 보장하라.

결국 군부는 시위대를 체포하지 못했고, 신문들은 이 시위 소식을 보도했다. 비록 군부의 통제를 받는 TV 방송들은 이 시위를 철저히 무시했지만 말이다.

우리는 계속 투쟁할 것이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전념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올해 10월 타이사회포럼 개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것은 민주주의와 사회 개혁을 위한 투쟁을 논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 **자일스 자이 웡파콘**은 쿠데타의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도 글을 보내왔다. 그의 글 ‘타이는 다시 암흑기로 돌아가는가’는 〈맞불〉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

주목받는 브라질 급진 좌파의 대선 참가

10월 1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브라질에서 선거 막판에 터진 집권당 음모론 때문에 현 대통령 룰라의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스캔들 때문에 룰라가 거의 7백만 표(10퍼센트 이상)를 잃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룰라의 지지율이 50퍼센트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이제 겨우 30퍼센트대로 올라선 사회민주당(PSDB) 후보 알키민과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 게다가 룰라는 18개월 전에 이번 스캔들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부패 추문에 휩싸였지만 이를 무난히 극복한 바 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9월 21일치)도 점쳤듯이 아마도 룰라가 재선에 성공할 듯하다.

룰라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 주된 이유는 브라질 경제의 안정과 성장 덕분일 것이다.

물론 브라질 경제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세계 경제의 제한적 ‘회복’이었다. 특히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의 원자

엘로이자 엘레나

재 수요 급증 덕분에 브라질의 외화 수입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브라질 최대의 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 주 소재 70개 기업 대표들이 사실상 룰라를 지지한다고 공개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룰라에게 실망한 지지층의 이반도 늘어났다. 룰라는 연금 ‘개혁’을 내세워 공무원 연금을 삭감했다. 그러나 고금리 정책을 통해 정부는 은행들이 5천2백억 헤알(약 2백25조 원)의 천문학적 이윤을 챙길 수 있게 해 줬다.(그 돈이면 정부의 교육과 보건 의료 예산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

2002년 대선 때 룰라는 브라질에서 굶

주리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기아제로”)고 약속했지만, 지금 브라질 가구의 46.7퍼센트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북동부 지방에서는 이 수치가 70퍼센트에 이른다.

또, 룰라는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을 비판하는 미사여구를 곧잘 말했지만 아이티에 브라질 군대를 파병해 미국을 도와주기도 했다.

기아제로

그래서 룰라의 신자유주의 정책들과 일관성 없는 반제국주의 태도를 비판하며 급진 좌파 후보로 출마한 엘로이자 엘레나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엘레나는 PT(브라질 노동자당) 소속 상원의원이었지만 룰라의 연금 개혁에 반대하다 몇몇 다른 의원들과 함께 PT에서 축출당했다. 그들은 다른 급진 좌파 정치세력들과 함께 2004년 사회주의

와자유당(P-SoL: ‘피솔’로 읽는다 — 편집자)을 창당하고 룰라에게 실망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 기반을 확대했다.

엘레나가 P-SoL 후보로 출마한다는 것이 알려지자 하워드 진, 마이크 데이비스, 켄 로치, 알렉스 캘리니코스, 존 리즈, 질베르 아슈카르, 다니엘 벤사이드, 슬라보예 지젝, 올란도 치리노, 제임스 페트라스, 패트릭 본드 등 국제적으로 저명한 급진 좌파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다.

이번 대선에서 P-SoL은 사회주의노동자단결당(PSTU)·브라질공산당(PCB)과 함께 ‘좌파전선’을 결성해 선거 기반을 확대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엘레나는 바이아·히우데자네이루 등 여러 주(州)에서 지지율 15~18퍼센트를 기록하며 룰라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등 선전하고 있다.

브라질판 ‘사회적 자유주의자’ 룰라를 극복할 대안으로 등장한 엘레나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자못 기대된다.

이수현